

김영록 “공론화위·균형발전위 상설화…통합 난제 해결”

주청사 위치·20조 활용 방안 등 논의
특별시정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 확립
최영태·이민원 교수, 자문위원장 합류



해소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영태 전 광주공론화위원장(전남대 명예교수),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명예교수)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 공론화 분야와 균형발전 분야에서 각각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두 사람은 김 예비후보 ‘탄탄캡트’의 제1·2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특별시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공론정부’ 형태로 전남광주특별시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해 시민공론화위원회와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함으로써 특별시정의 주요 현안 해결과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주청사 결정 등 현안을 비롯해 원활한 광역행정 집행 대책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포함한 모범적인 광역단체 통합모델 등에 대해서도 시민 합의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0조원의 통합 인센티브의 활용 방안부터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 주민자치 향상, 특별시 권한, 재정 분배, 균형발전기금 및 지역소멸대응기금 운영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2개 위원회를 통해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초대 특별시장이다 다른 곳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특별시의 기틀을 잡아가면서 반도체 등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는 데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보여주기식 대기업 유치 경쟁 앞서 공공일자리 쟁겨야”

신정훈, 전남·광주산림조합과 간담회
필수 공공영역 실질지원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국회의원)는 25일 “전남·광주의 미래는 보여주기식 대기업 유치 경쟁이 아니라 산림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일자리 존중, 생활권 불평등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이날 전남·광주 산림조합장 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대기업 유치 공약과 관련해 “모든 후보들이 삼성, SK 같은 대기업 유

치에 힘을 쏟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 유치가 공감하나 지금의 전남·광주에 꼭 맞는 처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그에 앞서 이미 지역에서 묵묵히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외받은 직종과 공공일자리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며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필수 공공영역 종사자들에게 대한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후보는 이날 산림정책과 조합 운영 현황, 현장 애로사항 등 주요 현안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산림의 공공적 가치와 정책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 후보는 “산림은 단순한 자연을 넘어 농·어업과도 다른 결을 가진 공공적 자산으로 산림의 공공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산림조합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확충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생활권 불평등 해소 구상도 제시했다. 신 후보는 “새로운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갖춰진 인프라를 어느 지역에서나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먼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교통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시원기자

민형배·주철현, 본경선 앞 공동 행보

오늘 순천서 동부권 정책 공동회견
현안 입장 발표…연대 가능성 관심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주철현 국회의원이 본경선을 앞두고 공동 행보에 나서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 의원과 주 의원은 25일 오전 순천시청에서 동부권 정책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민 의원과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전남 의과대학 설립, 반도체 산업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공통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광주시의회에서 통합특별시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주 후보와의 일정이 추진되면서 기존 일정을 취소했다. 두 후보는 검사(주 후보)와 청와대 근무(민 후보)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왔다. 평소 자신이 원조 ‘친명(친 이재명 대통령)’임을 자

처하며 친분을 과시해 온 만큼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또는 연대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본경선이 임박하면서 경선 구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는 중도 사퇴한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을 전남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와 신정훈 의원 역시 지난 25일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유현진 대주교를 함께 예방한 이후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내부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은진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오전 나주시 영산포품물시장에서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혁신당은 호남의 정치적 자식”

나주·함평 단체장 후보와 지지 호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25일 전남권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호남 공략에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 전망대를 찾아 “혁신당은 창당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내란 격퇴 등에 있어 그 어느 정당보다 더 푸르게 활동했다”며 “혁신당은 나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나주가 혁신 도시로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혁신당은 호남의 정치적 자식”이라고도 규정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뒤에 진보와 개혁,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낮추는 것은 잘못됐다”며 “그런 점에서 (혁신당은) 견인차와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2인 선거구제, 3·5인 선거구제를 유지하면 내란 세력과 극우세력, 친윤(친윤석열) 세력이 다시 살아난다”며 민주당을 향해 “다시 한번 정치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김덕수 나주시장 후보와 함께 호수공원을 시작으로 영산포 품물시장, 나주농민회 영농발대식,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김진수기자

전남도,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지원

여행사 300곳 선정 업체당 200만원

전남도는 25일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장기화된 무안국제공항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여행업계의 경영 회복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6억원이다. 전남지역 300여개 여행사를 선정, 업체당 200여만원의 여행상품 개발비를 지원해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

한 체류형 여행상품 기획과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한 관광상품은 온라인 여행플랫폼(전남관광플랫폼)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남도는 관광객 체류 기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여행업계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사업은 3주간 공모 절차를 거쳐 4월 중 여행사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재정기자

알고당시다

개인형이동장치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EA RO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